평의회 반대 불구 '직권 폐지' 발표할 듯

전남대 총장 직선 존폐 오늘 중대 고비

전남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음에 따라 대학본부의 최종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윤수 총장은 3일 총장 직선제 존폐에 대한 대학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총장은 2일 보직교수들과의 회의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직선제를 고수하다가는 재정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구조개혁 대상에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대의·심의기구인 전남대 평의원회가 주도해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교수 1172명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94명이 참가, 697명(70.1%)이 총장 직선제 유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297명(29.9%)이었다.

표결결과는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대학 평의원회의 최종 입장이 '총장 직선제 존치'로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평의원회는 "표결결과를 받들어 총장직선제를 수호하겠다"고 공언했다.

평의원회는 총장직선제 존폐 등을 다루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학측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심의가 법적구속력이 없어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학칙개정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김윤수 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수들의 총의와 달리 직선제 총장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직권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총장은 현행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게되면 교과부로부터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직선제 폐지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제외돼 50억여원의 예산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남대로서는 당장 이달부터 진행되는 대학평가 사업은 '산너머 산'이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이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오는 9월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추려낼 방침이다. 가장 큰 배점 항목은 총장 직선제 수용여부로 알려져 있다.

총동창회는 "교과부의 각종 평가에서 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었다.

지난해 타 대학의 사례에 비춰 전남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꼽힐 경우 우수 인재 격감과 일부 학과의 미달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조개혁 대상이 되면 입학 정원이 20% 줄고, 각종 행·재정적 제재는 물론 500억원 가량의 예산 삭감마저 우려돼 대학의 위상이 곤두박질칠 수 밖에 없다. 내년 초에는 향후 7년간 대학의 연구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평가가 예정돼 있다.

전남대학교가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현행대로 고수할지, 교과부의 행·재정적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카드를 버릴 지 최종 선택이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평의원회＝전남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의기구. 교수·교직원 등 39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총장선출 방식 등 학칙 개정, 재정 운용 등 대학 주요 현안을 심의해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절차상 심의기구로서 의사 결정권한은 없다. 구성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총장 직선제 관련 투표를 주도했다.

전남대 총장 인선 어떻게 되나

김윤수 16일 임기 만료 교무처장 대행체제 운영

전남대 김윤수 총장의 임기만료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박창수 총장 당선자(1순위 추천후보)마저 자진 사퇴해 총장 공백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2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후보 2위로 추천돼 있는 이병택(55·공대) 교수 역시 선거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는 총장 임명 승인을 미루고 있다.

교과부가 김 총장의 임기만료일인 16일 내에 2순위자에 대한 총장 인준을 거부하면 전남대는 17일부터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전남대는 직무대행 체제가 시행되면 90일 이내에 새로운 총장 후보를 선출해 교과부에 임명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총장 임명승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교과부가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현재 전남대 본부측에서 총장 직선제 존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지 않은 상황에서 금명간 새로운 총장 인선 작업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회사 동료 폭행 혼수상태 … 동부경찰 3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은 2일 회사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혼수 상태에 빠지게한 혐의(상해)로 LH 전 직원 이모(3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식당 2층에서 회사 동료 박모(3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폭행,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다.

LH 계약직으로 일했던 이씨는 환송회식 자리에서 또다른 동료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을 말리는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참 〈8623〉 김종두

여성환자 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영장

서울 서초경찰은 2일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본보 8월 2일자 6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씨와 자주 만나 식사를 같이 했으며 불면증을 호소하면 영양제를 투여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마트, 매곡동 입점소송 또 졌다

광주지법, 청구 기각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 이마트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이마트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에도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2010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샹젤리제 코리아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북구가 소상공인 피해와 반발을 이유로 내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한 결과 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북구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이마트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연염색 체험 여름방학을 맞아 2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주)터전 천연염색 체험장을 찾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자신의 옷에 황톳물을 들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심 주택가에서 황구렁이 소동

쌍나팔

○…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주택가 골목에 길이 1.5m의 황구렁이가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 광산소방서는 이날 주민 신모(여·5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렁이를 안전하게 포획, 인근 야산에 방사.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광주 도심에 뱀이 출현한 것은 처음인데, 비가 오거나 날이 습하면 뱀이 나올 수 있다"며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문지르거나 심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도청 녹비 납품 알선" 돈받은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주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채모씨로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건너간 흔적은 없고,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씨는 또 종자수입업자로부터 '전남도청에 녹비 작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여차례 7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업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도에 녹비종자를 독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2009년 7~9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부산식물검역소 직원 A씨에게 수입종자의 검역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가출 여중생 성매매 시켜 돈 갈취

여수경찰, 7명 검거

가출여중생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남성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일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20)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6월초부터 가출한 중학생 A(14)양과 B(14)양을 여수시내의 한 모텔에 가두고 30~40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회당 10만~13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 여중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